

「주간 북한경제 동향」은  
한주간의 주요기사를 정리  
하여, 북한 경제의 실상을  
이해하고 남북 경제 협력  
사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고 있습니다.  
www.dprkinvest.org

# 주간 북한경제 동향

## Weekly DPRK Business Review

2008년 12월29일(월)  
통권1호(제1권 제22호)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0 아남타워 907호

발행처 :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전 화 02-782-2677  
팩 스 02-3452-2312  
이 메 일 master@dprkinvest.org

북한투자전략연구소 시론 이 시론은 남북의 여러 사안에 대한 북한투자전략연구소의 생각과 의견을 담은 글입니다.

##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 발전을 본보기로!

12월 21일 중국의 왕이 대만관공실 주임은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 간 「4회 양안경제문화논단」에서 중국은 본토에 있는 대만 기업에게 3년에 걸쳐 13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5조원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만 기업의 본토 공공 건설 투자, 신규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 등에 대한 참여 지원 및 본토 진출 대만 기업에게 국내 중소기업과 동일한 특혜 부여 등 모두 10개항의 경제협력 조치를 발표했다. 발표 후 중국 자칭린 전국정협 주석은 “세계경제의 침체위기가 계속되고, 대만이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면 중국은 총력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1회적이거나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것임을 시사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통상, 통항, 통신의 전면 교류를 뜻하는 대3통 시대가 개막됐다. 중국은 도시와 항구 63곳, 대만은 11곳을 개방했고, 주말에만 이루어졌던 직항기는 매일 운항하게 되었다. 내년부터는 상호 송금도 가능하게 됐다. 1979년 중국이 대만에 3통을 제한한지 30년만의 일이며, 이로써 양안은 경제공동체로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양안관계의 순항을 보면서, 사실상의 통일로 향하는 양안에 대한 뿌듯함과 ‘남북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안타까움에 남북의 많은 사람들은 착잡한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남북은 그 전에 먼저 오늘이 있기까지 양안이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양안의 과정이 지고지선한 길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남북에게는 교훈과 시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로 상징되는 실용주의를 앞세워 중국이 개혁과 개방에 나선 것은 1978년이다. 그 후 중국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 1978년에 비해 GDP는 68배 증가하여 미국과 일본에 이은 세계 3위이며, 외환보유고는 1만 배가 증가한 세계 1위의 국가가 됐다. 그러나 이런 성과가 있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했다.

당시만 해도 냉전의 찬바람이 몰아치던 때라 중국의 개방개혁에 대한 세계의 불신은 컸다. 중국은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때 중국이 주목한 것이 화교자본, 그 중에서도 대만자본이었다. 그래서 중국은 대만자본의 본토 투자를 유도하는 많은 정책을 실시했다. 그리고 실용주의에 부합하는 철저한 정경분리의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대만 동포에게 중국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었다. 대표적인 예가 1983년,

『외자기업법』에 앞서 『대만 동포 투자에 관한 특별우대법』을 제정한 것이라 하겠다.

투자의 안정성이 확인되자 대만자본의 투자는 줄을 이었다. 대만 당국이 본토 투자를 규제하면 제3국을 우회하면서까지 투자를 늘렸고, 그 결과 2007년 상반기 중국 내 대만기업의 수는 7만여 개이며, 대만 상위 500대 제조업의 약 70%가 중국에 진출했다. 또한 대만자본의 투자 성공에 안심을 하면서 외국자본의 투자도 본격화되었고, 이러한 투자의 홍수가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어 오늘의 비약적인 성장을 낳은 것이다.

요컨대 실용주의를 앞세운 철저한 정경분리가 오늘의 중국과 경제공동체로 향하는 양안관계를 만든 것이다.

정경분리에 입각한 실용주의는 대만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오늘의 양안관계 정립은 올해 집권한 마잉주 총통의 실용주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집권 초 마잉주 총통은 “정치는 얼음을 녹이고, 경제는 불을 붙인다(政治融冰 經濟昇火)”며 현실성이 없는 대륙 수복정책을 공식 포기했다. 반대로 적극적인 양안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세계경제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려고 했다.

어떻게 보면 양안관계 개선은 수출주도형 경제인 대만에게 더 절실했을 수도 있다. 대만으로서 최대 교역 및 투자국인 중국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여부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에서 촉발된 세계경제의 위기가 실물경제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치적 명분과 공허한 구호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과 실리를 선택한 마잉주 총통의 실용주의는 중국의 그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북은 어떠한가?

사실 3통의 기회는 남북이 양안보다 먼저 잡았다. 꼭 1년 전인 2007년 12월 13일, 남북은 양안보다 먼저 3통문제에 합의했다. 물론 개성공단과 금강산 등 남북관리구역에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남북은 장성급회담을 통해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해결한다는 군사보장 합의를 채택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명분을 앞세운 남북의 기싸움 속에 3통은 고사하고 금강산과 개성공단마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양안은 날아가고 있는데, 남북은 담보는커녕 후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0년, 아니 20년 넘게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양안의 순항을 축하하고, 뿌듯한 하기에는 2008년 무자년의 우리 세밀은 그래서 더 춥고, 어둡다.

## ▶제22호 목 차

### 이주의 칼럼

한반도의 봄이 수상하다 ----- 2

### 이주의 주요 기사

통일연구원 '비핵·개방·3천' 수정 제시 ----- 3

北, 비료생산에 석탄가스 이용 시설 공사중 ----- 4

조건식 사장 "대범하게 금강산 관광 재개를" ----- 5

美國무부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계속" ----- 6

경기도 내년 대북사업 예산 올해보다 28% '축소' ----- 7

정부, 현대아산 협력업체에 70억 대출 ----- 8

미 차기정부 대한반도 정책 인선 윤곽 드러나----- 8

대북 식량지원 9년만에 '제로' ----- 9

Report: SKorea seeks talks with North to fix ties ----- 10

北朝鮮、総書記の動静報道相次ぐ 食糧不足の不満抑制か ----- 10

추천논문 / 동북아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제안 ----- 12

함께 보는 최근 북안단신 / ----- 12

### 이주의 북한 관련 행사

●이기택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초청강연회

▶주제: 바람직한 통일정책의 방향과 국민통합

▶일시 : 2008년 12월 29일(월) 17:00

▶장소 : 4.19혁명기념도서관 1층 강당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

건강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엔 우리 민족이 하나되어

함께 발전하는 새날이 열리길

기원합니다.

「주간 북한경제 동향」 독자님들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두손 모아 기원합니다.

### 이 주의 칼럼

## 한반도의 봄이 수상하다

이승철(경향신문 논설위원)

미국의 오바마 정권 출범을 앞두고 나오는 시나리오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다.

첫째는 내년 1월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별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워싱턴에서 오바마측 관계자들을 만난 정부 관계자들은 이 시나리오를 지지했다. 또 대북 강경세력의 급격한 북·미 관계진전 우려와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의 발언권 유지 바람도 이 시나리오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시나리오는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가 천명한 '직접 대화'에 주목한다. 이 시나리오는 미국의 특사파견과 함께 북·미 직접 협상 개최를 점치고 있다. 그러면 6자회담의 역할 변화, 심지어 6자회담 자체의 변화가 예상된다. 베이징 6자회담을 보면 북한은 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과연 어느 시나리오가 맞을까. 해답은 미국과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에 따라 어느 한쪽이 맞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둘 다 맞을 수도 있다.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 패턴이다. 클린턴 정권이나 부시 정권 모두에게 한반도 문제는 중동문제 등에 가려 대외정책에서 항상 뒤에 밀려 있었다. 그때마다 북한은 큰 것 한 방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으며, 미국은 얼마간 한반도 문제 해결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북한의 관심 끌기와 미국의 땀질식 처방이 지난 16년간의 관계 패턴이었던 셈이다.

클린턴 행정부는 북핵 문제가 제네바 합의로 해결의 가닥을 잡자 눈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그러다 1998년 8월말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자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을

평양에 파견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그리고는 2000년 10월 조명록 차수가 방미할 때까지 미국은 현상유지에 만족했다.

부시 정권도 마찬가지다. 대북 무시정책을 취하던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의혹이 제기되자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를 방북시켰다. 그리고 나선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할 때까지 내부 강온과 싸움으로 시간을 보냈다. 2006년 9월 핵실험은 시점상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카드의 성격이 강했다.

최근 서울을 찾은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에게 개인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오바마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차지할 위치를 물었다. 우선순위가 향후 시나리오를 정할 결정적 변수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문제, 이란문제, 그리고 경제위기로 인해 한반도 문제가 오바마의 가시권에 들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오바마 정권 초기에는 새로운 동력 없이 한동안 현재의 국면이 계속될 것이라는 얘기다. 바꿔 말하면 북한이 시나리오 선택권을 가졌다는 뜻이다.

북한이 원하는 바는 분명하다. 북·미 직접 담판이다. 그러면 북한이 오바마의 눈길을 잡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패턴으로 볼 때 오바마 정권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북한은 내년 봄쯤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다. 우리로선 원치 않는 시나리오다.

그런데 시나리오 어디에도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한국의 존재는 없다. 존재감을 상실하고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오바마 정권 탐색에만 열중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또 실망한다.

(이 글의 원문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2221844575&code=990503](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12221844575&code=990503)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북한, 10월 수입차 관세 100%로 대폭 인상

-- 12월 15일 뉴시스

북한은 지난 10월부터 외국산 승용차의 수입관세율을 종전 30%에서 무려 100%까지 올렸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신문은 베이징의 북한 경제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국내 산업의 육성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이미 중고차의 수입도 금지했다고 전했다.

국산차 생산이 침체된 가운데 외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가 부과됨으로써 북한 주민의 자가용 소유는 거의 불가능해진 것으로 신문은 지적했다.

경제 관계자도 북한 주민에게 걸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조치라고 반발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관세율 100% 조치는 북한노동당 기관과 특수기관을 포함해 예외없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과 합작기업을 경영하는 외국인이 북한에 승용차를 반입할 경우에도 100%의 관세가 부과된다.

현재 북한의 자동차산업은 에너지 부족 등으로 가동률이 10% 정도이며 연간 생산대수도 4000~500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달라진 평양 르포] 휴대폰 화상통화 터지고, 스크린 골프장도 생기고

-- 12월 23일 중앙일보

17일 저녁 평양 순안공항에서 평양 중심가 보통강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주요 도로 거의 모든 상점마다 붉은 색 바탕에 '3세대 이동통신'이라고 쓴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이집트 오라스코프와 북한 체신성이 합작해 15일 개통한 3세대 이동통신(WCDMA) 광고다.

월드비전과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남북농업심포지엄 참석차 보통강호텔에 머무르는 3박4일간 로비와 커피숍에서 중국과 유럽계 외국인들이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8월 평양 방문 때까지 못 보던 광경이다. 북측 민경련 관계자는 "개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사용자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보통강 호텔에는 이탈리아와 이집트, 중국 등 외국인 사업가들로 북적였다. 한 이집트 사업가는 "북측과 자동차 산업 협력을 위해 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오라스코프 그룹은 시멘트공장과 유경호텔 건설, 휴대전화 사업에 이어 '오라스코프체신합영은행'을 만들어 은행업에도 뛰어들었다.

경색된 남북관계와는 반대로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한 외국과의 교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러시아에서 142인승 여객기 TU-204 1대를 새로 들여와 4월

부터 베이징~평양과 선양~평양 간 정기항로에 투입했다. 새 항공기 비상구 옆에는 'cut out in this area'란 표현과 함께 '이곳을 도끼로 까시오'라고 써여 있어 눈길을 끌었다.

보통강 호텔에는 투숙객을 위한 스크린 골프장이 18일 영업을 시작했다. 평양 능라도 정보기술교류사가 직접 개발한 '푸른 하늘'이란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골프장 관계자는 "회의장을 개조해 골프장을 만들었다"며 "한 조(세트)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홀컵 가까이 샷을 하면 '나이스 어프로치'라는 음성과 함께 "훌륭합니다"란 문구가 화면에 뜨고 '위더해저드'도 '물장에 구역'으로 표시하지만 다른 골프용어 대부분은 영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용 요금은 1인당 1시간에 10유로.

'푸른 하늘'은 20대 개발자 10여 명이 매달려 1년 걸려 만들었다고 했다. 개발자들이 중국을 드나들며 수집한 자료만으로 호주 오거스틴 골프장을 비롯해 미국 유럽의 9곳을 스크린에 옮겼다. 프로그램 오류 수정작업 중인 개발자 이영성(22)씨는 "중국 골프장에 가봤고 남측에서 개발한 골프존을 봤다"며 "현재 고속카메라가 없어 약간의 오차가 있지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비핵·개방·3천' 수정 제시

-- 12월 23일 연합뉴스

북한이 비핵화와 개방을 이루면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을 3천달러로 만들어 준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대북정책 구상인 '비핵·개방·3000'이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에 의해 상당히 크게 수정 제시돼 주목된다.

통일연구원은 23일 연구원이 새로 만든 '남북협력포럼'의 출범을 기념하는 학술회의에 제출한 '새로운 남북협력의 모색'이라는 발제문에서 남북협력의 새로운 추진 방향으로 '비핵·평화, 개방·개혁, 통합·통일' 3쌍을 제시했다.

'비핵·개방·3000'의 세 항목 가운데 비핵과 개방은 각각 평화, 개혁과 짝을 이뤄 제시되고 '3000'은 사라진 대신 통합·통일이 새로 등장했으며, 특히 세 항목의 상호관계가 비핵·개방의 조건을 충족하면 3000달러를 만들어 준다는 조건부식이 아니라 서로 병렬적이다.

연구원은 학술회의에 앞서 배포한 발제문에서 정부가 이러한 '신남북협력'의 목표를 추진해야 할 이유로 초기 '비핵·개방·3000'구상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성을 들었다.

다른 연구기관 연구자들과 공동연구한 결과인 이 발제문은 "기존 비핵·개방·3000 구상은 목표와 실행 계획간 연결에 전략적으로 문제가 있고 선거 구호성 이미지가 고착됐다"고 말해 그동안 이 구상에 제기돼온 비판의 일부를 수용했다.

발제문은 ‘신남북협력’의 비핵·평화 목표에 대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해 대북 비핵화 요구에 상응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목표도 부각시켰다.

발제문은 개혁·개방에 대해선 “북한 경제·사회적 위기 극복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통합·통일은 “남북통합을 통한 실질적인 통일 기반 구축”이라고 각각 제시했다.

이 연구를 총괄한 통일연구원의 김규륜 남북협력연구실장은 ‘3000’ 대신 통합·통일을 새로 제시한 것과 관련, “3천 대목은 개혁·개방에 녹아든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10년간 교류협력의 경험을 살리되 분단상태의 지속이 아니라 어느 때 갑자기 닥칠지 모를 통일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대북 교류협력 및 평화변형 정책의 일부 수용을 시사했다.

“UNDP, 북한 현지직원 경쟁채용·임금 직접 지불”

-- 12월 23일 노컷뉴스

대북 사업의 재개를 앞둔 유엔개발계획 (UNDP)이 직원을 경쟁 채용하고 임금은 수표나 개인 계좌에 직접 지불하기로 북한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개발계획은 앞으로 북한에서 현지 직원을 채용할 때, 필요인원에 최소한 3명의 후보자 명단을 북한 정부로부터 받아 면담과 서류 시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한 명을 선발하는 ‘경쟁 채용’ 방식을 택하기로 북한 정부와 합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유엔개발계획은 또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직원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각 직원의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에 입금해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해 유엔기구의 북한 직원 채용에 새로운 변화를 보였다.

유엔개발계획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외부 감사에서 북한 정부가 임의로 선정한 직원들을 회계, 기술 담당 등 요직에 고용하고, 월급과 수당, 임대료 등을 현금으로 북한 정부에 지불하는 등 유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많은 논란을 빚었다.

유엔개발계획은 지난 1981년부터 다양한 대북 사업을 벌여오다 자금이 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3월부터 사업을 중단하고, 5월에는 북한사무소도 폐쇄했다.

北, UNDP 사업 자금 전용 방지책에 동의

-- 12월 23일 연합뉴스

유엔개발계획(UNDP)은 내년 상반기 대북 사업을 재개하기로 하면서 북한 당국, 북한인 직원과 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는 달러, 유로화 등으로 교환이 가능한 일종의 외화태환권인 ‘외화와 바꾼 돈표’로 지불기로 북한 당국과 합의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

도했다.

‘외화와 바꾼 돈표’는 일반 화폐와 달리 북한 내에서 외국인들이 사용하도록 조선대외무역은행이 발행하는 일종의 외화태환권이며, 8종(1, 5, 10, 50전과 1, 5, 10, 50원권)이 유통되고 있다.

미국이 UNDP의 대북 지원사업에 제동을 걸 때 가장 문제삼았던 것이 지불수단으로 달러, 유로화 등을 사용한 점이었다.

UNDP의 대북 사업재개 조건으로 또 UNDP가 현지 직원을 채용할 때는 종래와 달리 최소한 3명의 후보자 명단을 북한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아 면담과 서류시험을 통해 1명을 최종 선발하는 경쟁채용 방식을 택하고, 이들 직원의 임금은 북한 당국을 통하지 않고 각 지원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직원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직접지급 방식을 취하기로 북한 당국과 UNDP는 합의했다.

北, 비료생산에 석탄가스 이용 시설 공사중

-- 12월 23일 연합뉴스

북한의 대표적인 화학산업 공장인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가 원유에서 나오는 나프타 대신 석탄을 태워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 비료를 비롯해 탄산소다, 폴리에틸렌 수지 등 각종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신문과 TV방송 등은 이 공사 진척 상황을 자주 소개해 북한 당국이 이 석탄가스화 공정에 쏟는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도 지난 17일자에서 “오늘 조선(북한)에서 온 나라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경제대상 건설”이라고 소개했다.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나프타 대신 석탄 연소 때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 화학제품을 만드는 이 공정은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된 석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은 각종 화학제품의 증산, 원료비 절감, 석유 의존도 완화 등 여러가지 커다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남한의 비료지원 중단으로 인해 북한의 농업생산이 막대한 지장을 받았던 만큼, 석탄 가스화 공정을 통한 화학비료 증산은 북한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의 강은학 부지배인은 이 시설 공사가 북한의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발전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말하고 “앞으로 수입원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조선신보는 전했다.

“남북 농업 협력사업은 8년 신뢰 쌓여 탄탄”

-- 12월 23일 중앙일보

“순수한 마음으로 접근하다 보면 상대방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고 다가오게 됩니다.”

17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제 8차 남북 농업과학자 심포지엄을 개최한 박종삼(72·사진) 한국 월드비전 회장이 밝힌 올해 회의의 소감이다. 올해 들어 경색된 남북관계로 8년 동안 이어진 회의가 올해 중단될 위기였지만 가까스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북한 농업과학원과 월드비전이 공동 개최하는 남북 농업과학자 심포지엄은 매년 진행된 농업지원 사업을 정리하고 새해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회의다.

“민간단체들의 남북교류 사업은 당국관계에 영향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8차례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동안 상황이 나쁠 때는 베이징이나 개성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에도 평양에서 열릴 가능성은 높지 않았지만 신뢰가 쌓여 어려운 남북관계 속에서도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한국 월드비전은 1994년부터 국수공장과 병원을 짓거나 비육우 60여 마리를 북한에 제공하는 등 긴급구호지원을 해오다 2000년부터 농업 전반에 대한 기술, 장비 지원을 해오고 있다. 북한 식량난을 해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바이러스 씨감자 보급사업이 대표적이다.

[북한경제소식] “의료기구 생산 120% 증가”

-- 12월 23일 연합뉴스

올해 북한 의료기구 생산분야에서 지난해에 비해 120%의 성장을 이뤘다고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20일 주장했다.

신문은 “국가적인 투자에 의해 의료기구공업의 기술갱신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여기에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평양기계대학의 연구사들이 동원됐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에서 연구사들의 협조를 받아 현대적인 구강종합치료기와 구강일반치료를 자체로 생산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췄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방송은 “전국의 의료기구 공장들은 자체의 특성에 맞게 전문화돼 있다”고 소개한 뒤 유리 및 광학의료기구는 남포의료기구공장, 기계 및 장치의료기구는 묘향산의료기구공장, 전자의료기구는 만경대원트젠공장, 교정기구는 함흥영예군인교정기구공장 등이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올해 20여개의 제약공장에서 기술개선 사업을 통해 의약품 생산 확대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17일 주장했다.

방송은 함경남도 흥남제약공장에서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하던 원료를 자체로 생산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생

산공장”을 조성했으며, 평안남도 순천제약공장에서는 폐니실린 발효공정 2개의 기술개선을 실현하고 터보 압축기 1대를 증설했다고 소개했다.

평안북도 운산역과 평안남도 순천화력발전소 사이, 함경남도 함흥 조차장역과 비남론역 사이의 철도 전기화 공사가 완공됐다고 평양방송이 20일 보도했다.

방송은 “주요 구간들에서 철도 전기화가 실현됨으로써 순천화력발전소의 전력 생산을 늘리고 2.8비남론연합기업소 생산 활성화에 필요한 물동 수송을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건식 사장 “대범하게 금강산 관광 재개를”

-- 12월 23일 연합뉴스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이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법으로 남한 정부가 “대범하게”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동시에 남북대화를 통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의 재발방지책을 만들며 이를 시발로 대북 인도적 지원 문제를 풀어가면서 남북경협 등 남북 현안을 논의해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사장은 23일 통일연구원이 새로 만든 ‘남북협력포럼’의 출범을 기념하는 학술회의에 토론자로 참석, 남북관계 경색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작됐지만 “역시 (결정적 원인은) 7월 금강산 사고가 난 부분”이라며 “결국 금강산 관광 재개가 남북관계 재개의 물꼬를 트는 단초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은 “일단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당국간 대화가 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금강산 사건의)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고 남북 현안도 풀자”고 강조했다. “그러면 인도적 지원문제도 풀 수 있고 남북경협 등 모든 문제가 포괄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그는 기대하면서 “(남한 정부가) 대범하게 나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솔로몬의 재판’ 우화를 들며 “애기를 놓고 서로 내 아이라고 싸웠는데 친어머니의 마음은 좌우간 애기부터 살려놓고 보자는 것”이라며 “이번 같은 경우 좌우간 우리 정부가 대범하게 관광을 재개하고 대화로 논의하자고 나가면 정부 입장에서 편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선(先) 관광재개를 요청했다.

전문가들, 남북협력 추진방안 제시

-- 12월 23일 연합뉴스

각 분야 전문가들은 23일 오후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남북협력의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교통, 통신, 에너지, 교육 분야에서 남북협력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안병민 연구위원은 교통분야 남북협력 추진방안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이 북한에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치열한 물류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간 통행협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북한 화물의 90% 이상을 철도가 담당하는 현실에서 북한 수송 개선 없이 남북 경협이 발전은 없다”며 “북한은 올해 처음 비행기 티켓을 전산화하고 최신형 러시아제 여객기를 구입하는 등 항공수요에도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통신분야 발제자로 나선 김주진 KT통신망연구소 수석위원은 이달 중순 북한이 이집트 회사와 합작으로 제3세대(3G) 이동통신 영업을 시작한 것과 관련, “남측과 국제로밍이 가능해 앞으로 우리 전화기를 북한에 갖고 가서 일부 지역에서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북한같은 새 (이동통신) 시장은 일반적으로 유선보다 무선 선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 우리처럼 가입자가 폭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수석위원은 또 “북한은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김정일 위원장의 의지가 보태져 정보화 사회로 단번에 도약하려고 한다”며 “현재 위기에 처한 남한의 정보통신 산업에 북한지역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美 국무부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계속”

-- 12월 24일 연합뉴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식량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면서 12월말께 2만1천t의 식량이 북한에 도착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23일 밝혔다.

이번 달 말에 북에 도착하는 식량은 6차 지원분이다. 미국은 그동안 5차례 걸쳐 북한에 옥수수과 밀, 콩 등 곡물 14만3천330t을 보냈고 지난 5월 1년에 걸쳐 50만t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손 매킨 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 “인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이라며 “멀지 않은 시기에 2만1천t의 식량이 배달돼 북한 전역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식량계획(WFP)과 미국의 비정부기구(NGO)들과 협력해 식량 배급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식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식량배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매킨 맥 대변인은 북핵 6자회담 진전을 위한 북한과 접촉 계획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까운 장래에 어떤 접촉을 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6자회담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장애요인은 북한이 검증의정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검증의정서에 서명하기만 하면 6자회담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 방미 불투명

-- 12월 24일 노컷뉴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평양 연주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민간 차원에서 추진돼 온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방문이 불투명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방문을 추진해 온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인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바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윤곽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여서 북한 교향악단의 방미 추진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레그 전 대사는 “민간 차원에서 북한 교향악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미국 정부의 정책에 직접 반대되는 일을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레그 대사는 “특히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방문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행사라며, 차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단체들이 자금 지원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열린 6자회담에서 북한과 핵 검증체제에 합의하지 못한 이후 북한 교향악단 초청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국무부 내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한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에반스 리비어 회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방문을 매우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리비어 회장은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방문에 대해 국무부 내에 조용한 지지가 있다”면서 “그 같은 지지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연말 南北 모두 ‘집안 단속’ 주력

-- 12월 24일 헤럴드경제

연말을 맞아 남·북한 모두 부쩍 내부 단속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동요된 사회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달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 전까지 뚜렷한 전기(轉機)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같은 국면은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17주년과 김 위원장의 생모인 김정숙 탄생 91주년을 맞아 북한은 잇따라 축하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체제 내부 단속에 나섰다.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23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7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남한의) 사소한 선제타격 움직임



에 대해 그보다 신속하고 더 위력한 우리식의 앞선 선제 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안보의식을 고취했다.

앞서 국가안전보위부는 18일 간첩 행위를 하던 북한 주민을 적발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노리는 자에 대해서는 이 세상 끝까지 다 뒤져서라도 반드시 잡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15일 논설을 통해 "위기의 순간에 의리를 지킨 사람은 혁명가의 삶을 빛냈지만 그렇지 못한 인간들은 배신의 길로 굴러 떨어졌다"며 "배신하지 말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북한에도 체제 저항가요 존재한다’

-- 12월 24일 중앙일보

북한 사회에도 70·80년대 한국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유행한 ‘노가바’(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형태의 저항가요가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고 PBC평화방송이 24일 보도했다.

평화방송은 창립 20주년 특집 3부작 ‘북녘에서 듣는 아침이슬과 모차르트’에서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와 대북 전문가, 관계 전문가들과 인터뷰한 결과 북한 사회에도 다양한 형태의 체제 저항가요가 실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방송은 탈북가수 박성진 씨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저항가요는 ‘개사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1970년대와 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유행한 ‘노가바’(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가 90년대부터 북한에서도 등장했다는 것이다.

널리 알려진 북한 가요의 가사를 바꿔, 체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형태다. 북한 보위부 고급간부출신인 탈북자 이금용씨에 따르면 북한에선 지금 김일성이 항일 투쟁당시 직접 지었다고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혁명가요들까지도 주민들에 의해 가사가 바뀌어져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노래로 불리고 있다고 방송은 전했다.

경기도 내년 대북사업 예산 올해보다 28% ‘축소’

-- 12월 25일 뉴시스

경기도는 내년 대북사업 예산을 올해 보다 28%가량 축소했다. 도 관계자는 25일 “경색된 남북관계 등으로 올해 계획했던 사업량이 줄어들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 사업비를 올해 60억원에서 43억원으로 17억원 가량 줄였다. 사업비를 감액한 것은 올해 사업비 중 실제 투입된 예산이 20억원 가량으로 집행률이 30%대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도는 이를 토대로 내년에도 양묘장 조성 및 말라리아

공동 방역, 벼농사 협력사업 등의 대북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北조통연 “극단적 사태 또 터질 수 있다” 대남 비난

-- 12월 25일 뉴시스

북한 조선방송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산하 조국통일연구원이 전날 발표한 ‘남북관계 전면 차단 위기 책임전가’ 제하의 고발장을 25일 보도했다.

방송은 ▲선언 존중인가 부정인가 ▲대화와 협력을 진짜로 바라기는 하는가 ▲상생, 공영, 진정성의 정체는 뭔가 등으로 구성된 고발장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며 ‘반공화국 대결정책을 버리라’고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조통연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패당’ ‘역적도당’이라고 지칭했다. 또 국내 주요 언론 보도를 다수 인용해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 삼았다. 조통연은 고발장에서 “북남관계를 전면 차단의 위기에 몰아넣은 반민족적 죄행을 폭로·단죄한다”며 “지금 남조선 정권은 북남관계를 전면 차단의 위기에 몰아넣은 범죄적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고 온갖 기만술책을 다 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조통연은 “상생, 공영, 대화, 진정성이니 뭐니 하면서 여론을 어지럽히는가 하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 해 마치 북남이 마주 앉으면 무엇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요사스럽게 떠돌고 있다”며 “이는 날로 높아지는 내외의 비난과 대북정책 수정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철면피적 꾀변”이라고 비난했다.

조통연은 “남북관계가 파국에 처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사대매국과 반공화국 대결 책동 때문”이라며 “북남관계를 오늘의 험악한 지경으로 끌고 온 장본인이 누구이며 북남관계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폭로키 위해 고발장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북한 전면전·정권교체 대비 한·미 철저한 대응책 세웠다”

-- 12월 25일 중앙일보

윌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미국과 한국군은 2008년 한 해 북한의 전면전에 철저한 대비를 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정정 불안이나 정권 교체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25일 연합사 측에 따르면 샤프 사령관은 지난 22일 한국군 예비역 장성 모임인 성우회가 주최한 주한 미군 장성 초청 ‘송년의 밤’ 행사에서 “양국 군은 하나로 뭉쳐 북한에 대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의 언급은 한·미 군 당국이 올 8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 징후 포착을 계기로 북한

의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고 구체적인 대책도 강구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연합사령관이 북한의 전면전이나 정권 교체 가능성에 대한 한·미 군 당국의 움직임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한·미 양측은 한반도 안정에 영향을 미칠 북한의 급변 상황을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세부적인 대응 방안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북 시나리오에 포함된 여섯 가지는 북한 김정일 정권의 교체 외에 ▶쿠데타 등 북한 내전 ▶북한 체류 한국인의 억류·인질 상황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WMD)의 외부 유출 ▶홍수·지진 등 대규모 자연재해다.

#### 평양에 등장한 크리스마스 트리 ‘눈길’

-- 12월 26일 노컷뉴스

성탄절을 맞아 평양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통일교 계열의 평화그룹이 경영하는 평양 보통강호텔 로비에 지난 12월초부터 아름답게 장식한 성탄 트리가 등장해 호텔을 찾은 북한 주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평양에는 또 만경대구역 건국동에 있는 봉수교회 내 강단에 지난주 처음으로 성탄 트리가 선을 보였다. 봉수교회에는 250여명의 교인들이 주일예배를 보고 있다.

보통강호텔에 설치한 성탄 트리에 대해 북한 안내원들은 “성탄절 때문이 아니라 새해맞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현대아산 협력업체에 70억 대출(종합)

-- 12월 26일 연합뉴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에 남북협력기금 70억원을 대출하기로 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26일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의 경영상황 악화 등을 고려, 현대아산을 통해서 협력업체에 대출하는 방식으로 70억원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대출기간 1년에 이자율은 2%로 하고,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은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7월11일)에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광 중단이 장기화하면서 심각하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남북협력사업자로 지정된 업체에만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현대아산을 통해 대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6~19일 제21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 서면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

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교추협은 그러나 제주도의 대북 감귤·당근 지원사업에 물자 수송비 20억4천만원을 지원하는 안은 부결했다.

#### 北신문 “금융위기 교훈은 ‘외자 위험성’ 입증”

-- 12월 26일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동신문은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는 부시 미 행정부가 “침략적인 대외정책을 강행해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 것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며 이것이 주는 교훈은 “서방 열강이 다른 나라, 민족들의 자주권을 유하는 침략적인 대외정책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6일 입수된 이 신문 17일자는 세계금융위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또 “특정한 나라의 화폐를 기축통화로 하지 말고 다무적인 화폐제도를 세우고 실시해야 한다는 것”과 “세계화에 맡겨둘어 민족경제가 말살되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금융위기의 다른 교훈들로 꼽았다.

#### 미 차기정부 대한반도 정책 인선 윤곽 드러나

-- 12월 27일 노컷뉴스

버락 오바마 차기 미 대통령 정부에서 한반도 담당 관리들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서 정책기조와 관련한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미 언론들은 차기 오바마 정부에서 아시아 지역을 담당할 인사들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으로 제프리 베이더 브루킹스연구소 중국담당 선임연구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로 커트 캠벨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지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 두 직위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을 담당하는 실질적인 자리로 북핵사태 등 지금까지 이어온 대아시아, 대한반도 정책노선과 관련해 주목되고 있다.

커트 캠벨이나 제프리 베이더 두 사람 모두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관리였으며, 대북관련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한 인물들로 지금까지의 정책노선에서 큰 혼선을 없앨 것으로 전망된다.

캠벨은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 CNAS) 소장을 맡아 왔으며, 아스펜전략그룹의 아시아담당 국장, 워싱턴 퀴털리의 논설실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국가안보정책국 안보프로그램 국장을 맡기도 했었던 그는 민주당 예비경선 당시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을 조언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차기 국무장관으로 클린턴이 지명됨에 따라 동아태 차관보로서 대 한반도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와 미 무역대표부(USTR) 등에서 잔뼈가 굵은 제프리 베이더는 미중 의회워킹그룹 멤버였는데다, 이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홍콩부총영사 등을 역임한 경력을 기반으로 아시아 정책의 핵심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더 역시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서 검증과 관련한 측면에서 전반적인 오류가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정확한 검증을 강조하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던 전력으로 미뤄 볼 때 향후 대북정책에서도 검증을 위주로 하는 북핵정책이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워싱턴 정가에서는 현재까지 6자회담을 맡아왔던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새로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대북특사에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캠벨, 베이더의 두 축으로 하는 대한반도 정책라인의 전반적인 기조는 부시 2기의 정책에서 나타난 북핵검증과 대화 모색이라는 측면을 내세우면서도 기존의 줄기가 이어지는 형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 대북 식량지원 9년만에 '제로'

-- 12월 28일 연합뉴스

올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도 전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 없었던 것은 1999년 이후 9년만에 처음이다.

정부는 지난 16~19일 남북협력기금 사용을 의결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서면)를 개최했지만 대북 식량지원 건은 논의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08년분으로 1천974억원이 책정됐던 대북 쌀 지원 예산은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를 통해 해온 간접 식량지원도 올해는 건너뛰게 됐다.

정부는 2009년 예산에 참여정부 시절의 지원량에 해당하는 액수를 반영했지만 지원이 이뤄질지 여부는 당국간 실질적인 대화 재개 전망과 맞물려 있어 유동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 차원에서 직접 제공하는 대북 식량지원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무상으로 쌀 15만t이 제공된 것이 시효였다. 이어 정부는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쌀 차관 지원을 시작한 이래 그해부터 2007년까지 남북대화의 정체기를 보낸 2001년을 제외하고 매년 쌀을 지원했다. 2000년과 2002~2005년, 2007년 연간 30만~50만t의 쌀 차관을 제공했고 북핵위기가 고조된 2006년에는 쌀 차관은 없이 수해 지원 명목으로 쌀 10만t을 무상지원했다.

이와 함께 1996년부터 시작된 국제기구를 통한 식량지

원도 1999, 2000, 2006년을 제외하고 매년 진행됐다. 따라서 정부의 직접 지원과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지원이 모두 이뤄지지 않기는 1999년 이래 올해가 처음이다.

#### 北매체 “대결정책 계속시 내년 남북관계 더 악화”

-- 12월 28일 노컷뉴스

북한의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명박 정부가 내년에도 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하려 한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28일 주장했다. 이 매체는 '북남 대결을 계속 추구하려는 망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통일부 차관이 각종 행사에서 "지금의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북한에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한 것 등을 거론, 이는 "내년에도 반통일적 정책들을 계속 추구"하려는 "뚜렷한 증거"라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매체는 '안정적 관리'라는 것은 "지난 1년간 북남관계를 파국에 몰아넣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대결 일변도로 나감으로써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원칙'이라는 것도 "'비핵·개방·3000'과 '상생·공영' 대북정책을 수정하거나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발언은 남측이 "동족대결 책동을 추구하려는 정권의 속심을 드러낸 것"으로서 "내년에도 북남관계는 더욱 더 악화되고 조선반도(한반도) 정세는 예측할 수 없는 엄중한 국면으로 치닫게 되리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며 "계속 반공화국 대결 책동에 매달린다면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매체는 덧붙였다.

#### 개성공단 탁아소 내년 초 착공

-- 12월 29일 연합뉴스

개성공단 내 탁아소 건설 공사가 내년 초 시작된다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관계자가 2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탁아소 설치를 위한 설계 작업을 마쳤으며 금명간 시공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공사는 내년 초에 시작해서 연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사는 내년 1월 시작될 예정이지만 날씨 등의 사정에 따라 다소 늦춰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달 열린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를 위한 탁아소(200명 수용 규모) 건설 비용 9억원을 의결했다.

#### Report: SKorea seeks talks with North to fix ties

남한이 북측과 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의 길을 찾는다

-- 12월 23일 AP

출처: [http://www.google.com/hostednews/ap/article/ALeqM5jjz-1FsdSMQjYDWp3qoa60B4b\\_jwD957N6R80](http://www.google.com/hostednews/ap/article/ALeqM5jjz-1FsdSMQjYDWp3qoa60B4b_jwD957N6R80)

South Korean media reported Monday that Seoul is seeking secret contacts with the North to defuse escalating tensions on the peninsula. But officials in the South denied they were pursuing talks.

The Yonhap news agency said the two Koreas have held secret talks and Pyongyang expressed a strong willingness to improve ties, which have sunk to their lowest point in years.

During the meeting, the North proposed a deal to repatriate some South Koreans —either taken prisoner during the peninsula's 1950-53 war or abducted after the conflict ended — in return for Seoul's resuming economic aid to its impoverished neighbor, Yonhap said.

The Chosun Ilbo reported that South Korea had merely been in contact with Pyongyang through unspecified channels to propose meeting behind the scenes. ....

남한의 미디어들이 남측 당국이 점증되는 긴장의 완화를 위해 비전 대화의 길을 찾겠다고 보도했으나 당국은 이를 부인하였다.

연합뉴스는 양측이 비밀회담을 가졌으며 북한은 저점으로 치달은 긴장의 수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보도했다. 회담에서 북한은 한국전쟁 국군 포로와 휴전 이후 납북된 인사들의 송환과 대북지원 재개를 맞교환하자고 제안했다고 연합통신은 전했다. 조선일보는 평양에 비전라인을 통해 막후 회담을 제안하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와 같은 보도들에 대해 부정했다. ....

Let's Confront North Korea on Human Rights - The Helsinki process provides a model for Obama.

북한인권 문제에 맞서자- 헬싱키 프로세스가 오바마에 모델을 제공한다

-- 12월 23일 Wall Street Journal

출처: [http://online.wsj.com/article/SB122999769691029167.htm?mod=googlenews\\_wsj](http://online.wsj.com/article/SB122999769691029167.htm?mod=googlenews_wsj)

Memo to President-elect Barack Obama: It's time to adopt a new approach to North Korea that firmly establishes a link between human rights and security. Congress has twice endorsed such a link by passing and reauthorizing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without a single dissenting vote.

Throughout the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s, the United States' primary policy objective toward North Korea was to negotiate an end to its nuclear capability. So far, we have not succeeded. For the past five and a half years we've been engaged in the on-again off-again Six Party Talks, which have focused, almost exclusively, on the nuclear issue.

We have also relied on the efforts of North Korea's two neighbors, China and South Korea, both of whom we hoped would join us in applying serious pressure on the regime. It now seems clear that while neither nation is pleased with a

nuclear North Korea, each for its own reasons appears to prefer the devil it knows to an uncertain future that could be created by the regime's collapse. ....

오바마 당선자에 보내는 메모 : 북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안보 문제와 인권 문제를 연계하는 방법을 적용할 때다.

클린턴과 부시행정부에서 미국의 정책은 북핵 문제를 종결시키는 것에 집중하였지만 현재까지 성공적이지 못했다. 북핵문제에 집중한 6자 회담이나 특히 한국과 중국에 의존했었다. 평양은 미국의 이러한 제한된 단편적인 접근을 이용하여 북핵 해체의 검증과정도 수용하지 않은 채 최대한의 양보를 이끌어냈다.

이에 대한 대안적 길은 냉전 후반기 양대국 체제에서 동서간 진행되었던 정권이 자국민에 대하는 방식을 외교적 관계와 강하게 연동(헬싱키 모델)하는 것이다. ....

北朝鮮、総書記の動静報道相次ぐ 食糧不足の不満抑制か 北한의 잇따른 김정일 총서기 동정 보도는 식량부족 불만을 억제하기 위해서?

-- 12월 20일 니혼게이지아이신문

北朝鮮メディアが金正日総書記の動静を立て続けに報道している。総書記の健康状態を巡る憶測の打ち消しに加え、食糧不足に備えた体制引き締め意図がにじむ。経済援助を狙いに対韓国関係で軟化の兆しを見せ始めたとの見方もある。

「偉大な將軍は今年も年頭から年の瀬のきょうまで絶え間ない現地指導の道を歩んだ」。ラヂオプレスによると、労働党機関紙「労働新聞」は24日付の社説で、金正日総書記の健在ぶりを強調。北朝鮮メディアは21日まで5日連続で総書記の陶磁器工場などの視察を報じている。

北朝鮮が動静報道に一段と力を入れているのは健康不安説が浮上してから3カ月以上たっても総書記が表舞台に姿を見せず、国内の動揺が続いているためとみられる。

북한 언론이 김정일 총서기의 동정을 연달아 보도하고 있다. 총서기의 건강 상태를 둘러싼 억측을 잠재우고, 식량 부족에 대비한 체제 단속의 의도가 엿보인다. 경제 원조를 목적에 대한국 관계로 연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견해도 있다.

「위대한 장군은 금년도 신년부터 새해의 오늘까지 끊임 없는 현지 지도의 길을 걸었다」라디오 보도에 따르면, 노동당 기관지 「노동 신문」은 24 일자의 사설로, 김정일 총서기의 건재 모습을 강조. 북한 언론은 21일까지 5일 연속으로 총서기의 도자기 공장 등의 시찰을 알리고 있다.

북한이 동정 보도에 한층 힘을 쓰고 있는 것은 건강 불안설이 부상하고 나서 3개월 이상 총서기가 공식상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국내의 동요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추천 논문

## 동북아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조정식(민주당 국회의원)

현 단계 한국의 동북아시아 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체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서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나진-햇산 프로젝트’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나진-햇산 프로젝트’는 북한 SOC에 투자하여야 하는 사업의 특성상 민간 물류기업들이 중심이 된 루크 로지스틱스 컨서시엄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비용과 risk 관리 측면에서 무리가 예상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공기업, 그리고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는 확장된 형태로 프로젝트의 추진 주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 부처는 국토해양부,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등 유관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T를 구성하여 상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 TFT는 러시아 및 북한 정부와 사업 추진을 조율하고 협조를 이뤄나가야 한다. 또한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정책자금을 활용한 금융 지원 및 기업 차원에서 준비하기 힘든 risk hedge 방안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본 사업과 관련된 공기업은 사업 기반 조성기부터 민간기업들과 공동으로 컨소시엄 법인에 참여하여 프로젝트의 추진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본 사업의 러시아 측 주체인 러시아 철도공사와 TSR 기반 대륙 물류 체계 구축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은행 등의 국책 은행과 국제물류펀드 등 공적 기금의 참여는 프로젝트 추진의 재원 조달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기업들은 사업 수행 의지와 참여의 적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참여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프로젝트의 비즈니스적 가치를 중시하고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와 프로젝트가 완결적인 단계에 이르렀을 때 운영상의 혜택을 지향하는 경우에는 상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에 개방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즉, 민간기업의 참여는 사업 기반 조성기, 구축기, 그리고 실제 사업 수행단계에서 각 기업의 필요에 따라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컨소시엄에는 물류, 건설, 해운,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의 민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재구축된 사업 추진 주체는 ‘나진-햇산 프로젝트’ 만이 아니라 동북아물류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들의 추진 주체로서 지속적으로 역할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와의 교역이 지하자원, 에너지, 식량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특수화된 목적의 물류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민관협력 사업 추진 체계는 국가의 전략적 지향을 구현하는 이상적인 사례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글의 전문은 <http://www.krlove.net/> 커뮤니티-북한관련자료실의 공공기관 연구자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는 최근 북한 단신

## 북한 노동신문, “6자회담 교착은 미국 탓” 보도

○ 북한이 북핵 6자회담의 교착을 미국의 탓으로 돌리고 나섰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미국의 강경론자들이 북한에 대해 “긴 채찍”을 휘두르며 양국 관계를 “극심한 긴장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동신문은 또 미국이 대화의 장 뒤에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초 베이징에서 막을 내린 6자회담에서는 북한이 미국과 다른 회담국들이 제시한 검증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결국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결렬됐다.